

[더미래연구소 - 더좋은미래] 긴급토론회

더미래연구소 - 더좋은미래 긴급토론회

사드의 한반도 배치 국익과 평화에 부합하는가?

일시 : 2016.07.20.(수) 오전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더미래연구소
KOREA INSTITUTE FOR THE FUTURE

사드의 한반도 배치 국익과 평화에 부합하는가?

기조강연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전 통일부 장관)

좌장 홍익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김홍규**(아주대학교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방공호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십시오. 이문제 해결 안 되면 경제도 엉망이 됩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화해가 없는 데, 뭘 나눴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자세,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져 나가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사드 배치를 가능한 지연시킬 수 있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받도록 야당들이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 왔다고 하셨죠. 저는 정치권에는 뭐 적을 안두고 있습니다만 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민주당은 입을 닫고 있고, 국민의 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의당이 나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제 1야당이 이래서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4.13 총선에서 나온 국민의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와 언론도 교외당 프레임으로 사드배치 반대를 꺾으려 하는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전자파 소음 환경문제를 거론하거나, 또는 사드의 명중률 등 효율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아니면 배치 위치의 적절성 문제, 내지는 수도권 방위 페트릭울프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의 말이 안 된다는 등의 논란을 버리는 자체가 정부여당의 술수에 끌려들어가는 겁니다. 논란을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심지어 진보 언론들도 이런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질이 아닌 지협적인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다보면, 시간이 경과 되면 은 사드배치 문제는 결국 불가협적인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 1야당은 사드배치 관련에서 여론조성에 선두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어떤 다 섹트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을 곁에서 한 3분정도 모셔봤는데, 김영삼 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관을 했었어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더 세팅을 하거나 이슈를 제기하는 것에 탁월한 분이 계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끔 끌고 나가는 그러한 정치인이었는데, 왜 지금 민주당에는 그러한 인물이 없습니까? 전부다 후계자라 그러고 친노라 그러면서, 왜 그러한 분은 없습니까? 사드배치가 가져올 국가 차원에 방대한 악영향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객관적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본 토론에 참가한 학자들을 전문가들을 모십니다. 끝입니다.



사회자 : 홍익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정세현 장관님께서 짧지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저도 외통위에 있을 때 하긴 했지만, 사드문제를 떠나서 오래전부터 태평양 지역의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 때 부터 사실상 MD체제 편입에 모든 기초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일군보호협정이나, 군수 관련 협정으로 MD체제에 맞물리면서, 한미일 군사동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사드 문제가 한국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드배치는 결국에 한국이 미국의 MD체제 편입에 관한 것이 고요 이것은 마치 과거 구한말 한일 강제 병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단순히 경제적 연대를 넘어서 군사적 지휘까지 염두해둔 사실상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일상적으로 대결구도와 군비경쟁이 상시화 되는 그러한 불안한 한반도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미국 중심성 외교가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앞으로 차기정부와 관련해서 제 1야당 더불어 민주당의 책임성, 그리고 이슈 주도를 하면서, 사드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에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 군사적인문제 뿐만 아니라, 성주나 경북의 일부 이렇게 지역적 측면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오히려 현 정부에 말리는 것이 아니냐 보다 큰 차원에서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국가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우리가 야당이 이슈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중요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세현 전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박홍근 의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는 데요. 토론에 참가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전의원이고요 진성준 전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전 의원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국방 관련 일을 해오셨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4년 동안 국방위에 계시면서, 국방문제나, 외교안보 문제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십니다. 좋은 국방정책과정에서 대하여 좋은 견해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평화네트워크 정호식 대표님이십니다. 잘 아시지만 오랫동안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관련 이슈에서 주요 현안마다 입장을 밝혀 오셨고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군사 기술적 측면, 그리고 한미관계에 여러 외교안부 이슈에서 폭넓게 입장을 계진해서 저의 식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왼쪽 편에 계시는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흥규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넘버원이라고 하면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세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십니다. 중국 내부에서 여러 변화라던 지, 중국 정치권에서의 변화 또, 한중관계 등 다양한 관계, 또 사드문제에서의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할 것으로 생각할 때, 김흥규 교수님의 한중관계 관계에 대한 소개가 우리의 인식을 더욱더 폭넓게 이끌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데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소개는 김준형 교수님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준형 교수님은 오랫동안,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토론회에 나오셨고, 미국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하십니다. 특히 이 사

드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미국과 중국 소위 픽업 투 아시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변화와 확장 또 중국의 신양대국관계 두 강대국의 충돌 속에서 사드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좀 더 거시적 측면에서 논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서에 따라서 제가 소개한 순서 반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김준형 교수님, 김홍규 교수님 정운식 대표님 진성준 의원님 순서로 10분 정도, 15분 드릴까요? 네 15분 드리겠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국회에 지난 월요일에 왔었구요, 다음 월요일에 또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같은 말 써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워낙 엄중하고 중요한 사안이라서,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판단정렬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입장 그리고 동북아 전체적 관점에서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사드배치 결정은 결국 MD의 일부고, 그 다음 한미동맹이 더 이상 대북억제 동맹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권의 일부로 확장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전부터 미국의 일관적인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 드리는데요.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 이후부터 탈냉전 이후부터 모색되었던 거구요. 일본에 집단자위권을 넘겨주고, 그 다음 한미동맹의 본격화 삼각동맹의 본격화를 위한 미국의 오랜 고민과 질의와 결정과 배치를 앞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핵심에서는 Ashton Carter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Ashton Carter는 냉전 직후 탈냉전이 오면서,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미국의 탈냉전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예방방위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요. 한국에도 발매가 됐지만, 1994년 1차 핵위기가 왔을 때, 연변 폭격론을 주장했는데요. 두 가지는 긴밀하게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보는 예방방위의 초점은 탈냉전이 되었다. 됐지만, 직접적인 위협이었던 소련은 사라졌지만, 위협은 남아있다. 위협은 당장에 위협으로 넘어가진 않겠지만, 위협으로 넘어갈 개연성이 너무 많다. 그 것은 남북관계도 있겠고, 테러리즘도 있겠고, 아직은 아니지만, 중국도 포함되겠죠. 위협이 위협으로 발전되면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협이 되기 전에 미리 짝을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상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에서의 전쟁으로 늦어졌지만, 미국이 최근에 중국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될지, 아님 힐러리가 되면 국방장관으로 카터를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이 사람은 단순한 국방장관이 아니라 국방 전략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난 6월 20일 CNASS에서 미국의 미래전략에 대한 중요한 정리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제목을 주시면, 책에도 썼는데 Grand Strategy of Network Centrality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전 세계를 네트워크화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매트릭스인데요, 마치 거대한 네트워크에 수많은 축수들이 달려있고 그 끝에 캡슐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캡슐이 생각도 지배하고, 그 다음 행동도 지배하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그런걸 표현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캡슐로 들어가게 되는, 결국 중앙통제장치인 네트워크에 속하게 되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미국이 무슨 중앙 네트워크의 단말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도 싫어 할 수 없고, 모니터만 바라보고 행동명령만

받는 그러한 거대한 네트워크에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것 이죠. 한민구 장관이 대답을 했었죠, 당사자들은 MD지만 한국사드는 MD가 아니다. 막걸리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한국에 입장에서는 사드를 줘도 미국에서 배치를 해도 한국은 운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미국은 이걸 한국 사드에만 네트워크를 연결하지 않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사드는 일개 포병중대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 이미 대통령이 그쪽으로 방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그렇게 밖에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KAMD, 그리고 사드 앞으로 SM-3까지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정웅식 대표께서 잘 설명해 주실 텐데,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호운용의 측면에서 현재 한국이 이것을 운용할 능력이 있겠느냐 결국인 이것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KAMD의 사거리 자체가 한반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MD의 체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운영, 지휘, 통제, 정보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같은 소스로 연결 되어있다.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이 저는 2011년부터 촉발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그 다음 rebuilding이 그 동안의 이 rebuilding에 대해서 굉장히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비판은 어떠했냐면, 겨우 나온게 2~3년 동안 나온게, 공군과 해군전력을 50:50으로 했던 t결 60:40으로 해놓은 것 말고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거 하고 지금의 MD 배치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은 단순히 오바마의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이 계속 가게될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면 이것이 루비콘 강을 통과하는 것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과정에서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는 없지만, 반증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의 주도와 페이스대로 흘러갔고, 그리고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결정과정이 편승을 했다. 저는 미국의 촉구아래에서 한국이 압박을 당했다. 약점을 잡혔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북분노, 대중 분노, 그동안의 개성공단 이런 것들 모든 카드들을 소진한 박근혜 정부가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더 덧붙일 수 있다면, 미국의 주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것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바마 2기는 그야말로 미일동맹의 꽃을 피운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 한미일 같이 가져 가고자 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한일관계가 나빠지면서 미국이 중간에 조정을 합니다. 일단 확실한 일본과 공조를 한 다음에 한국에 손을 뻗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과는 2014년 10월에 two+two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시점으로부터 2월 12일 아베가 방미하는 것으로 방점을 짓고, 실질적인 집단자위권을 인정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 시킨 다음에 히로시마를 가면서, 상징적인 것 까지 완전히 화룡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한국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에 미일 동맹구조도 그렇고 한미일 삼각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동등한 삼각동맹이 아니고, 미일동맹이 아시아를 책임지고, 한미동맹은 그 하부동맹으로 그런 구조로 가는 것 기술적으로나 동맹의 역학적 관계에서도, 한미동맹은 그냥 동맹이 아니라 미일동맹에 종속되는 그러한 한미동맹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는 전시작전권까지 포함됩니다. 미국이 초기에 한국에게 전작권을 가지고 가라 한 것은 그것이 한국이 원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코스트를 최소화 해야한다. 부담을 나눈 측면이다. 부담의 차원이었지만, 지금 것은 보시겠지만 모든 네트워크가 통합되는 측면이기에 우리가 작전권을 준 것은 미국에게 꽃노리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시기가 앞당겨 졌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이 사실, 성동격서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런부분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면, 한국이 일본에 대한 어떤 우려, 중국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 어정쩡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 정도의

면밀한 전략을 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호하게 있다가.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후 중국에 대한 배신감 북한에 대한 배신감 또는 분노가 더 이상의 카드가 없었던게 201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대중경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그전에는 미국이 계속 띄우고 찌르기 해보고 한국에 적극적으로 요구 했는데, 1월 13일날 스스로 한국이 카드를 던져버린 것이죠.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별다른 계획이 없었던.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합치가 된거구요. 왜그러냐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이 1월 13일날 하기로 한건데 2월 13일 한달만에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망신을 주는 상황이 됩니다. 뭐냐하면, 케리오와 우리가 합의를 한다음에 사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한미실무단의 행위가 논의가 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 국방부를 설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철저히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들게 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자세들을 보면, 남중국해나, 북한인권문제나 미국이 좀 더 강경한 입장을 펴는데, 한국은 또 예를 들어 말려드는 것 보면, 우리가 미국의 페이스에 계속 말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미 정치일정 부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기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빨리 넘어가려 하는 것 같고, 그나마 반발이 적을 여당에 텃밭을 골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역시 다가오는 대선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그 보다는 미국도 한국에 진보정권이 들어설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권교체. 그렇게 되면은 사드배치가 난항을 격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불가협적으로 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드배치의 문제점 체크리스트를 보면요. 뭐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사드배치의 정당화를 위한 입체적인 포괄적인 접근이 아닌 단순한 이론화 강론화 기술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건데, 말리지 않아야 한다. 정세훈 장관님이 말씀 하셨구요. 여기 전략화 문제는 아주 미끼가 되고 있구요. 그리고 님비라고 하는 것도 오늘 한민구 장관이 양심은 있었는지 님비라고 부르는 것은 심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사악한겁니다 이거는. 무슨 상주에 쓰레기장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성주가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인데, 외부인이 어디있으며, 님비가 어디있느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이 북풍에서 냉전풍으로 넘어 갈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수도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샘플을 주고 샘플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 2, 3 MD가 계속 될 것 같고요. 적극적 방어전략이라는 것에서 동북아 안보 딜레마, 군비경쟁이 일어나고. 한미, 중러 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지는 MD를 방어무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식하냐는 전체적인 전략적 균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이야기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제가 준비한 지도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거대한 판이 그려지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위에서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해상통로를 지배하고 있었던, oil shipping lines이라고 되있는 데요. 밑에 일종의 일대일로 연결되어있는 이부분은 김홍규 교수님이 잘 설명 하시겠지만, 진주목걸이 전략을 일본의 다이아몬드 전략, 이걸로 진주목걸이를 끊고 한미일군사동맹과 경성봉쇄라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군사동맹을 통해서 이것을 끊겠다는 것이죠.

작년 올해에 있어서 미국이 단호해 졌다고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소파가 있습니다. 두사람이 앉아야 되는 연인끼리는 앉기가 좋은데, 덩치가 큰 두사람은 매우 불편합니다. 어깨 머리 엉덩이 부분 허벅지 부분 이 붙이칠 수 있는데 이 네가지 점을 미국이 확실하게 찍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반도는 사드배치고요 두 번째는 백안양안인데 이게 묘하게도 독립을 부르짖는 정권이 등장했고, 동중국해는 생각보다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남중국해는 미국이 압박을 하고 이 네가지 점에서 확실하게 미국이 자기 경계선을 그

중에서 사드가 가장 강력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구요. 미일의 다음의 순서가 작년부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남중국해에 있어서는 확실한 태도를 표하라, 저는 이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있어서, 한국이 갑자기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사드배치는 중간쯤에 있다고 보고, 남중국에 미국편에 들게 되면 완전히 도리킬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하시고, 남중국해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야당의원님들께서는 표현을 하셔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다음 정부까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기를 이야기하면 말려드는 것이고요. 속으로는 연기가 미니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시민 불복종이든 국회비준이든 소파협정 계정이든 온갖 수를 써서 미국을 사드 재배치 무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홍익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짧은시간에 해주셨는데, 제가 사정에 대한 배경설명만 드리고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진핑체제 들어오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게,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측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태평양을 미국과 중국이 함께 써도 충분할 만큼 넓다. 중국과 미국이 공유하자. 이에 미국은 사실상 크게 반발을 했죠. 제가 그 이후에 워싱턴에 갔을 때 워싱턴의 분위기는 거의 그런 우리에게 대한 도전, 미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을 미국의 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현재 중국 태평양지역에 중국과 그 것을 막으려는 미국이 전략이 충돌하는 점이고, 사드는 그 아주 상징적인, 무기체계를 통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소위 김준형 교수님께서 미국과 중국의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 중심으로, 새로운 다이아몬드형,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사드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무효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공개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미중의 전략적 갈등 속에서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김홍규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아주대학교 교수)



안녕 하십니까 아주대학교 김홍규입니다. 그 홍익표의원님께서 저보고 중국 문제 넘버 3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김준형 교수님께서 질투를 좀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 좀 과분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계 주요 경제지표들을 보면, 대체로 202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따라잡고, 그 다음 2040년대 중반 정도가 되면, 군사력의 규모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으로 보자면, 앞으로 10년 간 미국이 군사, 경제, 외교에 있어서 여전히 중국에 우위에 있는 시기고, 바로 그 시기가 세계체제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규범 규칙 원칙에 있어서 미국에 유리하게 안배를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차기 어떤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산다 할지라도, 사실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측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특히 금년부터 미국이 한반도 문제는 서로 미중간의 수기와 협력의 문제로 나왔던 것을 전략경쟁의 한 수단으로써 미중이 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상징적인 사안이 사드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이 사드문제의 결정 배경을 보자면, 2002년에 미국이 ABM조약을 탈퇴를 합니다. 냉전시기에 미국과 소련 간에 맺었던, 상호 방호를 하는 체계를 포기하는 이로서 열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냉전으로 관리하는데 성공했다는 상당히 중요한 체계인데, 미국은 당시 과학과 기술 그리고 군사적인 자신감에서 이제는 방어 무기체계를 수립하고 이해에 입각해서, 군사적 전략적 우위를 잡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는 건데, 이에 따라서 미 국방부는 관련된 보고서를 2010년에 공표한 바가 있고, 이는 대체로 MD체계를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태지역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의하면 사드배치는 이것의 2번째 단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단계는 보다 광역화된 레이더를 설치하고 해상에서의 레이더체계 그리고 SM-3까지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것을 다 육상기반과 미일한국을 연결시키는 MD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제정적, 경제적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팩스아 메리카3.0이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어떤 문제점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드러다 보면, 미국에 새로운 젊은세대들의 교육의 질이라던가 외부의 어떤 백인위주의 사회에서 라틴계위주의 사회로 넘어가면서의 지적 코스트라던가, 모든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중장기적인 경제전망도 그렇게 밝지 만은 않다는 것이 현재 새로운 분석입니다. 여기서 어떤 미국의 위축과 자신감 결여,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에서 보답을 더 구연하는 그래서 그것을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우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드를 이해해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안보관이 사실적으로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이 성공 했고, 2014년과 16년에 고각도 미사일 발사 그리고 최근에 핵실험 성공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안보 불안감을 강화시켰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수단에 변변찮은 대응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드에 매달린 것이 아닌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중간의 관계가 전략적인 협력과 공조를 위주로 한 복합관계에서 이제는 갈등을 위주로하는 복합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해 지면서, 한국이 추구해온 비영합적인 국제관계의 입지가 크게 축소되면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 결과로 한미동맹의 이완과 반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점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있는 동맹체제에 편승해서, 다자동맹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위협을 최소화시켜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물론 미국중심의 관성적 태도와 그리고 심리적인 조급성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에서는 이 동맹 강화를 통해서 단기적인 안보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북한에 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술핵 도입을 위한 것의 일환으로서 이를 활용하겠다는 생각도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중국과의 전략소통 하는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한중은 최근 4년간 여지껏 경험해 보지 못한, 좋은 한중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

평 주석간의 개인적인 공감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어떤 지도자 간의 호감에 입각한 한중관계가 얼마나 쉽게 허물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중국과 어떤 제도적으로 소통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국의 일종의 강박감, 조급증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중압박의 수단으로서 사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 이것을 동시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UN에 인권사범으로 발표한 것은 오바마 정부가 더 이상 북한과 대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하라는 요구이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중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위신, 위상에 있어서의 공격이고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우려하는 것은 이 사드문제배치를 국내 정치공학의 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패배한 박근혜 정부와 집권당의 정당성 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안보 대 경제, 혹은 한미동맹 대 중국 그리고 생존 대 안이함의 이분법 적인 대결로 끌고 가서 보수대결집을 피하면서, 이를 대선공약으로 연결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생의 구도보다는 안보의 구도로 변환시켜려는 모습을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생존 환경이라는 것이 동북아 냉전구도에 있어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의 이해는 아이러니 하게도 현재 국내의 사드배치론자들의 이해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측면의 확대는 현재 총선을 패배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드문제가 우리의 앞으로의 외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도구로 잘 못 활용된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엄중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제기 합니다.

사드의 효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하자면,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드의 현재 가능한 용도와 미래 가능한 용도가 섞여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초점이 안 맞고 있고 서로 간에 엄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기술이라던가, 체제가 완결이 난 것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계속 개발되고 있구요. 중국 측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드러올 사드와 그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그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사드체계가 가지고 있는 교만성과 확장성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군사적으로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재 우리가 드러오자고 하는 사드는 종말단계의 레이더를 가지고 상당히 제한된 거리를 그리고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백두산 계곡에 통화시에 중국의 주요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유사시에는 그 주일 미군과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공격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DF21-D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지대항 미사일로서 중거리미사일로서 일본이나 대한해협, 한국 쪽, 대만 쪽으로 진입하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상황에 있는데, 현재의 한국의 사드배치만으로도 이를 탐지하는데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밖에도 사드레이더의 성능을 개량한다거나, 추가 포대를 도입시, 이것은 아까 제가 말한

전쟁을 한다면, 한미 간의 합의 사항 즉 한 대의 포대를 가져와서 미군이 낼 돈으로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하는 것에는 미국이 반드시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이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포대를 더 드려야 되고, 그 돈은 한국이 지불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것을 결국 보다 더 광의의 MD체계로 연결시켜야 만이 원래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희망하고 있는 그 체계가 완성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특히 사드포대에 있어서 기술 보강이라던가 포대를 추가적으로 드려오면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이는 상당히 군사적으로 중국에게 위협이되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AD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있고, 정세현 전 장관님께서 말하신 대로 지금 미국이 점차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구도에서 한국이 편승해서 현재의 한반도 중심의 한미동맹이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의 지역동맹으로 부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드문제는 정확히 북한이고 우리고 우리의 주권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신경 쓸 거 없다. 내정간섭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이 구도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역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해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설득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지적입니다.

이 사드문제에는 중국이 어떻게 반발할 것인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 정세현 전 장관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시진핑은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실험을 했습니다. 기존의 발전 보상론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이제는 강대국으로서 세계전략을 구상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정책도 이제는 국가이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고, 북한에 대한 제제도 중국의 국가이익의 손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제한다라는 명목을 가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손상을 준다면, 반드시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고 시진핑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타성에 젖은 중국의 전문가 전략가들에게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재편하라는 요구를 했고, 남북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사실은 친한적인 정책을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도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드도입 이후 당에서의 질타 그 손상을 가져오고, 시진핑 본인 자체도 상당히 내상을 입은 상황이 되었고, 특히 수차례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권유하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중국 국내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인데 시진핑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해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국의 대응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보복을 더 불러이르키는 상황이 됩니다. 때리지 않고 싶어도 자꾸 때리라고 하면 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가지 좋은 소식은 그 중국도 이 동북아 구도가 냉전구도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가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북한이라는 약소국에 부합이되어서 계속 손상을 입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중국에 대한 불신감으로 중국이 끌고가는 구도에 끌려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 복잡한 선간의 이해관계 상호견제와 충돌과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중간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중국 자체도 지금 사드 자체가 완결된 사항이 아니고, 계속 진행될 사안으로 보고 있고,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현 전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구체적 보복이나 그런 것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 상황에서 그렇지만 중국이 한국에게 제제를 하거나 아주 아프게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 아무 간단한 것으로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대학의 학자들이 이번에는 한국여행을 자제를하자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1만

2천개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하자면 삼성이나 LG 등의 기업이 하고 있는 스탠다드를 표준들을 살짝만 바꿔버리면, 우리는 수천억 수백억을 투자했다가 날려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보복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를 쉽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중간의 관계에 대해서 북한의 대중무역비율이 90%라고 합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그러면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가 전체무역의존도에서 90%기 때문에 우리는 25%입니다. 홍콩까지 합치면 30%정도 되고요. 일본도 한 20%정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변수를 더 넣으면, 하나면 수치를 더 넣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각국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북한은 한 25%됩니다. 그러면 25% X 90%되면, 20% 미만이 됩니다. 우리는 거의 무역의존도와 GDP가 동등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의존도가 30%됩니다. 한국이 사실은 북한보다도 중국과의 경제의존도가 더욱 심각합니다. 북한은 일부만 가지고도 버틸 수 있지만 240만의 경제적 소득은 거둘 수 있지만, 한국 같은 민주주의 시장체계에서는 너무나 취약해 집니다. 일본 같은 20%라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20% X 20% 4% 미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넘버 2로 중국의 무역의존도에 있어서 취약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결정가나 전략결정자들은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생각할 때 우리가 훨씬더 신중해야 합니다. 즉, 안보를 국방의 측면에서만 이해를 하면, 훨씬더 아마 국방의 측면에서 망하기 보다는 경제의 측면에서 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더 오래 국방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느냐를 오랫동안 유지 할 수 있느냐는 역량은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할 때는 더구나 현재 사드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결정의 문제점 그러면 어떤 삶에 있어서 협소하게 국방에 측면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취약하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언에 관해서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한 미국과의 합의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드를 한 대를 드리는 겁니다. 북한을 위한 것 이것을 미국도 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차기 미국의 신고립주의 현상을 보면 한국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져 갈 겁니다. 제가 보기는 한미동맹도 약화될 것이라 봅니다. 미국 중심으로 변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안해하는 주한미군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사드배치를 지키는 것은 미국의 도움을 지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이 우려될 수 있는 것은 사드 체제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마 소파협정에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국회의 동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포대를 드러온다든지, 주요무기체계의 변경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논의하게 되었고 협의하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 장치들을 이 기제를 통해서 분명히 마련해 둔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고려할 수 없는 한미동맹, 미군 스스로의 안전문제 이것도 동시에 배려해주는 그런 노력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하자면 향후 대중외교를 어떻게 하는가. 좀더 심각하게 20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면, 한중관계가 서로 동북아 경제블록이 돼서 서로 도움이 되고 구조가 생겼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이제 점점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한중관계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미중경쟁에서 속에서 우리를 밀어내는 것을 양쪽에서 그러고 있고, 북핵문제, 사드문제로 이것이 더욱 심각해 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게 할 수 있겠나요. 죄송함

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사회자 : 홍익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

네 지금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시는 가운데, 신동훈 의원님 함께 해주셨구요, 김한성 의원님 오셨고, 기동민 원내대표님도 오셨고, 김동건의원님도, 정춘숙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홍규 교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말을 해주셨는데요. 중요한게 사드 배치가 역설적인 이야긴데 미군에 단 한 개로 미군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닐거라는 점, 실제로 사드배치는 미군에서도 2기 이상의 하나는 영남지국, 하나는 호남지국에서 하나씩 사드배치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이번의 성주지역의 배치는 사드배치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점이 되지 않을까 싶구요.

지대향 미사일이 통상적으로 2009년에 서해에 항모가 들어오면서, 개발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직사로 날라가는 반면에, DF21-D 같은 경우에는 고각도를 하늘로 날라가서 접근한 다음에 항공모함을 거의 한방에 격파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군도 이것을 무시하다가 실험을 하고 나서, 이게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사드배치가 DF21-D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발표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DF미사일이 뭐냐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소통 한미동맹과 아프로의 한국경제에서 중국이 가진 여러 위상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뤄야할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운식 대표께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네 감사합니다. 넘버 3 정운식 대표입니다. 앞에서 장관님과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제 집이 고령 창림동인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001년 3월달에 미국 대통령이 조지.W.부시였죠. 그때 햇볕 정책을 알리려고 DJ가 워싱턴에 갔다가, 부시의 MD 요청을 거부해서, 일부언론에서 표현한 것처럼 부시한테 뺨을 맞은 거죠. DJ가 왜 뺨을 맞으면서 까지 MD참여를 거부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부와 야당사이의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사드 문제에 관해서 나온 것 중에 몇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사드문제에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찬반문제를 떠나서 신중론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DJ의 햇볕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드문제에 관해서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 장관님 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햇볕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햇볕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정신은 우리 운명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개척해나간다는 자기중심적인 것인데, 사드배치가 되는 순간 우리의 운명, 한반도의 운명은 급격히 타자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셨고, 더 이상 설명안드려도 되겠지만, 이 문제를 더민주가 과연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더민주가 사드 뒷에 걸려 들었습니다. 걸려들었는데, 정작 더민주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뒷에 걸렸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오거나 되겠지, 그러한 아닌한 생각을 하고 있고, 뒷에 걸렸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빠져나오려 하면 나올 수 없게 되는 더 거세지는 이것이 제가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그런겁니다 반미 증폭으로 찍히면, 대선승리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팽배한 것 같고, 애매한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저는 그러한 근본없는 근거가 부족한 자기 두려움이 초래하고 있는 자기검열 이게 사드 문제에 대한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 대선 때 NLL문제다 안보이슈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 이런 피해의식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진것인지 아니면 실력이 부족해서 진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지, 막연히 안보문제에 밀려서 졌으니깐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좀 눈감으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 여전히 더민주에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소쩍히 말하자면은 그런 우려가 있구요. 저에게 주어진 발언 시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구요.

저한테 주어진게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 방어성 문제에 관해서 주어졌는데요. 그것도 말씀해 드리면 길게 말하게 될 수 있으니깐, 단문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사드포대를 성주에 배치하면, 대한민국을 영토의 1/2, 내지는 2/3를 방어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못막습니다. 평택기지 조차도 못막습니다. 그런데 평택기지는 실제 요격하는 것을 떠나서, 단순한 수학적 기초만 있어도 평택이 왜 방어가 안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솔찍히 말하면 그겁니다. 그 사드는 추락미사일이 아닙니다. 그 고고도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요격범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지표상의 거리는 짧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평택 캠프 험프리던 오산 공군기지던 북한 미사일은 날라오다가 직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포물선으로 날라옵니다.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인 40KM까지 북한미사일이 낙하하는 지점은 평택이 아니라, 수도권 휴전선 인근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택을 겨누는 고도에 오면, 사드의 요격 고도 밑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요격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깐 무슨 페트리얼트도 갖다 놓겠다 하는데, 페트리얼트는 기본적으로 문제도 많겠지만 페트리얼트는 기본적으로 point defense 지점방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점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회를 보호하려면 국회 인근에 뒤편이 돼요. 이걸로 수도권을 방어한다?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한다?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왜 스킨드 미사일하고, 노동미사일 썰다 하지 않았습니까. 상주에서 성주까지 한 380도 정도 됩니다. 그걸 쏘니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군에서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페트리얼트를 증강해야 한다. 성주 사드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지를 어디다 뒤편이 하냐면, 성주에 뒤편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방어시스템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사드를 성주에다 지으면, 사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페트리얼트를 놓고 또 페트리얼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갖다 놓겠습니까? 결국 성주의 군사화입니다. 이게 이제 사드가 초래한 군비경쟁인데, 성주에 사드만 딱하나 둔다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군사적, 거기만 대박나는 거죠 우리는 쪽박차는 거고.

이런 점도 좀 더 명확한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국회의원분들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떨어트릴 것 같으면 요격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확실히 맞을 수 있는 거아니냐 그러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2004년도에 미국이 10월 6일날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에 본토방어배치할 때, 그 당시 미 국방장관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it better

noting”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엄청 반대 여론이 많으니깐 그런식으로 라도 말하는 거예요. 그 때 그 발언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기가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 nothing better입니다. 없는데 좋은거예요. 이게 MD가 그렇게, 사드가 그렇게 좋은거면 1976년에 미국과 소련은 ADM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MD를 포기했겠습니까? 그게 있는 것 보다 없는데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판단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답변 받으면서, 13번 실험해서 다 성공했다. 그렇게 들었는데, 실험내용으로 보면 안되는게, 실험 내용을 봤습니다. 기막힌 내용이 많습니다. 비가 와서 실험취소되죠.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실험이 종료되죠. 뭐 눈이 많아서 잘 작동이 안되고, 뭐 전쟁이나서 북한의 미사일이 좋은 날씨만 골라서 날라 오겠습니까? 끊임없이 실험과 판단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배치를 서두르느냐, 대한민국 야당이라면, 적어도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국방부에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게 안되고 있는 점, 대단히 아쉽고요. 요격 실험은 공격자와 방어자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뭐니까? 공격자와 방어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깐 실험에서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짜여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요, 실전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안좋아서 취소되고, 전원이 안잡혀서 취소되고, 발사준비가 안되서 취소되고, 이런거 다 합치면, 명중률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레이더 관련, 중국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 웃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레이더는 미사일 구조를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게 북한 미사일이던, 중국 미사일이던 다 추적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과 무관하다고요?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탐지범위 600KM 이리저리 없습니까 600KM면 백두산 위에 살짝 위에 까지 나옵니다. 그것도 웃긴 이야기예요. 레이저에 직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말고도 간격에서 각도를 좀 더 높이면요 지표상 거리는 좁아지겠죠. 그래서 고도상의 탐지거리는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DF21-D 때문에, 이게 부채꼴로 퍼져나가면, 백두산 뒤에 있는 미사일은 러시아에 쏘지 않는 한 극동지역에 쏘지 않는 한, 탐지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군사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는 지금와서 한국이 아무리 중국과 당신과 무관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현재 미국에 사드 요격실험이 어떻게 진행 되냐면요, 이게 따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지스함, 페트리엇 시스템과 함께 통합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탐지 하는 정도를 증가시킨다.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미국항공모함이 유사시에 중국을 견제하면서 들어온다. 예를 들어 중거리를 쏘다. 사드 레이더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미군에 전달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SM-3 발사하면 미국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제법적으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드가 미국의 레이더를 사용하게 되면 군사적 적대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주권적 문제이기 때문에 왜 다른 나라가 간섭을 하느냐, 이야기를 합시다만, 저는 이걸 단순히 미국의 압력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미화, 변형된 자발적인 선택도, 없는 건 아닌데, 사드 배치를 주권적 사항이라 한다면, 그 결과는 가장 비주권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큼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지적되었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안으로 연결되는 말입니다만, 북핵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지금 한국은 사드가 없으면 페트리엇이 없으면, 북핵에 대한 대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땠어요? 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냉전시대에 미국은 4만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소련을 단 하나의 사드도 없이, 단 하나의 MD도 없이 성공적으로 역제를 했습니다. 4만개의 소련

도 역제를 했는데, 그것도 10여개 남짓, 이게 미사일에 탑재가 됐는지 안됐는지, 다른 어떤 군사적인 요인을 따져서 비교도 안되는 북한을 억제하지 못한다? 이걸 말이 안되지요. 오히려 야당분들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평화관리 공식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핵과 비핵화를 나가자는 그러한 적극적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 홍익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정욱식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군사적 기술적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서 재밌는 점이 국방부 장관이, 한민구 장관이 저희가 비판을 했을 때 했던 말이, 사드 배치가 서울 방어에 적합하지 않다, 서울같이 가까운 거리에 단거리 미사일을 쏘지 왜 고각도 미사일을 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 쏠 수 있으니깐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제와서 성주에다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안된다 비판하니깐, 북한이 그렇게 수도권 공격할 때는 고각도로 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국방부장관이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페트리얼로 방어하려면, 한국의 이통통신 기지국 만큼 페트리얼을 갖다 놔야 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실인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거래 쇼퍼가 되었는데, 이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성준의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진성준(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드배치를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야권은 어떻게해야할 것인가? 에 대해서 답을 내 봐라는 것이 제 임무였는데, 그 국회가 사드배치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사드배치를 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준동의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미국 주둔군 지휘협정 SOFA를 집행하는 것에 불구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약정의 약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동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부는 자신들이 좀 곤란한 것들은 온통 다 약정, 기관간의 약정, 조약이 아닌 협정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무효화하고 회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그러한 명칭이 조약이든 협정이든 아니면 약정이든 무엇이든지 떠나서 그것이 양방의 국가적 의미를 발생시킨다면, 그것은 문서이고, 국제법의 규율된 것이라면 모든 것은 조약으로 규정한다고, 비엔나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간에 국회의원 비준동의권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누차 반복적으로, 비엔나 협약이라는 국회조약에 근거가 되어있다는 것을 누차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배치하려고 합의하고, 이 것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한미공동 실무단을 운영해 왔는데, 이 공동실무단의 결론이 나서 배치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공동실무단의 약정이 있을거예요. 그런데 이 약정은 체결해놓고 2026년 까지 비공개를 해놓

고 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한미간의 약정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있는지 사드가 이번에는 한 개 포대가 들어오느냐, 그렇다면 한 개가 더 들어오는지 아닌지, 또 김종대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드네트워크 시스템이 갖추어 지는지 아닌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약정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중요한지 확인하지 못한채, 이 문제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1999년 4월 29일 판결인데요, 한 시민단체에서 SOFA에 2조 1의 나항이 위헌이다라는 위헌재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판결하면서, SOFA는 그 이름이 협정으로 되어있어서,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군대의 지휘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되어 있음으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한미군사주둔 협정 SOFA에 대해서 협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조약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조약이 필요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협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조약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것은 국회동의를 반드시 필요한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약정이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2004년도에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한강이북에 있는 주한미군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시키겠다는 합의를 한미간에 하고, 이 LPP 계정협정을 체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300몇십만평 되는 땅을 반환하는 것이니깐 이것은 재정적 부담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회의 비준을 받았습니다. 노무현정부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겠지만, 일종의 정부가 생색내려는 일은 국회의 비준을 받고, 자기들이 곤란한 것은 다 피하려는 거죠. 이 LPP 개정협정도 협정입니다.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작 이 LPP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구했으면서, 이 또 논란이 많은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되죠, 저는 주한 미군이 활용하는 무기체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미국이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비준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고 실제로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를 때에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국제법적 범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드배치를 하려면 우리 영토를 일부 미군에 공유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성주에 우리 공군의 반공포 기지를 그냥 내주는 것 아닙니까 내줄 뿐만 아니고 여기에 기반 시설을 갖춰야 줘야 합니다. 이 기반시설 구축은 우리가 해줘야 할 거예요. 그러니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에 사드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의 성주기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토에 관한 사항이고 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 시설을 구축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준현 교수님이나, 김흥규 교수님이나, 정육식 대표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사드가 이렇게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군사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사드시스템이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체계,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 정보를 미국에 통보해주는 단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주기지를 최우선적으로 타격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우리는 우리가 원치않는 전쟁에 흘러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전보장에 해가되는 조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깐

마땅히 국회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기왕에 2006년도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군이 추진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양해하고 동의하면서, 그런 부수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한국이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한미 간 합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드가 배치되면서 여차하면, 동북아 지역에 분쟁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개입될 가능성이 발생 한 것이죠. 그러니깐 기존의 한미간의 이러한 조약을 바탕으로 봤을 때에도 국회의 완전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 제 60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드도입과 관련된 한미간의 협정은 그것에 형식에 불문하고 국회의 동의와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비준동의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준동의 요구서를 내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가 이것을 심의하고 말 것도 없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저는 크게 2가지의 대응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조약절차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국내의 반대와 우려가 커지고 국회에서 몸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 때를 계기로 해서, 통상절차법을 입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깐 정부가 주요국과 통상에 관한 협정을 맺으려면, 그 단계 단계마다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과정을 꼭 거치도록,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법을 입법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통상절차법에 비하면, 국회의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발표하는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약절차법을 찬성하는 마음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써놓고 보니깐 박종인 의원 께서 통상조약 절차법을 발의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문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에 네덜란드의 경우를 예시해 댔는데, 이것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해서 내 놓은 것 그대로 해 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약절차법을 만들어서 아예 초기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주권에 관한 사항, 영토에 대한 사항, 재정적 부담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은 모두다 충족되도록 국회에 비준을 구해라고 재정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예산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를 배치하려면, 미군의 비용으로 운용된다하더라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성주군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우리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사드 포대를 만드는데, 포대의 기반 시설은 우리가 구축해 줘야 되거든요, 이 구축비용이, 방위금 분담내용이든, 국방예산이든 정부의 예산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시해가지고 통제하게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쉽게 사드배치문제에 관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도 사드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사드에 드는 비용을 반듯이 우리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화할 방안은 방위비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위비 분담금은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논의 체계를 구성하는데 에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가지고 사드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지를 감시하고 면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던, 국가안전회의(NSC)에 사무처를 부활 시켰는데, 이 사무처를 국회 어느 위원회에 소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디다. 그 것은 그간에 NSC가 만들어 진 이후 국회 국방위가 주로 소관 해 왔지만, 국방위에서 당연히 소관할 것을 요구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 소관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NSC 사무처는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해야합니다. 국방위 소속이든 외교위 소속이든 정리를 해서, NSC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해서, NSC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 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어쩌면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사드문제를 결정하고 발표하는데 배제된 것 같다는 관측이 있지 않습니까? NSC가 국방부 출신의 군고위관료 출신으로 장악되고 있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안보중심론에 쫓겨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많아가지고, 상명하복의 군사문화를 아주 신뢰하고 그것을 아주 효율적인 통치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군인 출신들에게 과도한 신뢰를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문민통치의 헌법적 원칙, 민주적 원칙을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가 법률통제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핵문제, 미사일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군사적인 방법으로 안되고, 협상해야 한다는거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단번에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게 할 수 없다고 보고, 이것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동결부터 하게 해야되요. 더 개발하지 못하도록 더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더 증강시키지 못하도록 동결과 동결에 대한 보상과 함께 폐기로 나아가는 경제적인 대화가 필요한데, 정부는 전혀 대화할 생각이 없으니깐요. 국회가 앞장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한다던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회담을 추진한다던지, 이러한 노력이 우선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으신데, 저는 지도부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정치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관점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드배치에 이르면, 정치적 등가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조건을 걸어서 찬성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 테면 한국인에 지는 부담은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주변국의 적극적인 동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암묵적인 이해는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배치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이 조건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실현 되는지를 확인하면, 실현된다면 동의 할 수 있다. 저는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지도부가 다수 보수적이다 안보적으로 우클릭을 하고 있다 해도, 그런데 이런 어떤 지혜를 발휘하려 하지 않고 그냥 찬반 아무입장을 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홍익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진성준 의원님 께서 국회 계시면서 느꼈던 부분을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단순 무기도입이 아니라, 군사기지 이전이나 제공문제는 영토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약 사항이 된다는 것은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평택기지문제에서 검토해왔기 때문에, 사드기지가 기존의 미군기지에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주에 새로운 포대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평택 미군기지에 설치하는 것과 또 다른, 실제로 성주에 공군기지를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확장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국회비준문제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해야한다고 보고요. 앞서 지금 국방부가 안보를 이용해서 협약, 협정이라는 이런거로 인해서 기본적인 조약에 관해서 국회 비준을 거치게 하는 법안을 저도 19대 때 제출한 바가 있는데, 기본 방향 자체가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를 위해 필요하고 앞에 NSC문제는 그때 진성준의원님과 함께 했는데, 통제를 안받는건 아닌데, 운영위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와대를 소관으로하는 운영위로 되어있다 보니깐, 청와대를 소관하는 운영위의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청와대 비서실에 초점을 맞추지 상대적으로 NSC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실의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성과 집중할 수 있는 국방위 쪽에 넘겨줘야 한다는게 저희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반대해서 결국 예매모호하게 이어지는 구조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요.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요.



더미래연구소 - 더좋은미래 긴급토론회

사드의 한반도 배치 국익과 평화에 부합하는가?

발행일 2016. 08. 16.

발행처 (재)더미래연구소(이사장: 최병모)

Copyright ©더미래연구소, 2016



※ 본 자료는 더미래연구소 - 더좋은미래 긴급토론회, ‘사드의 한반도 배치 국익과 평화에 부합하는가?’ 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 themirae.org

후원문의: 02-785-2030

※ ‘더 좋은 미래’ 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미래진보가 힘을 얻고, 꿈을 품은 사람과 정책이 키워집니다.
